

정 총리 “전공의 진료 거부, 법·원칙따라 대응”

“파업 중단합시다” 외친 전공의

“환자들 희생 잇따라” 대전협 집단휴진 연장 결정 비관 복지부 “대화로 풀어나가야” ... 즉시 현장 복귀 촉구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려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아 해매던 환자 두 분이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

는 의사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대화·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는 국민들께 또 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무기한 집단휴진을 벌이고 있으며, 30일 비대위의 재투표 끝에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집단휴진에는 전임의도 합류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기준 휴진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의대생들

은 9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까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앞서 26~28일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복지부는 지난 25일 의협과 만나 정책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코로나19 안정화 뒤 협의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휴진을 지속하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의협은 복지부 간부 맞고발과 함께 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SNS에 글... “국민 정책에 이익단체 허락 주장 납득 안돼”

30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이 정도면 됐다”며 동료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는 전공의가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날 페이스북 ‘일하는 전공의’ 계정에 의명으로 “환자들이 기다린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달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사들 생각이 중요한 건 맞다. 그렇지만 (전국민 중 일부인) 13만 의사들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흔히 말하는 ‘4대약 정책’에는 의사, 의대생,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공 의대 설립 예정인 남원에 거주하는 8만여 명의 주민, 취약구역을 원하는 국민, 한의사 등이 직접적

으로 연관돼있고, 넓은 범위로는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온 사회에 영향을 줄 정책에 대해 특정 이익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의사가 의료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입장에서 의사 수를 늘릴 때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을 넘어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의협의 허락을 받아 합의안을 도출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고, 받아들여질 리 만무한 요구”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회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연태영(왼쪽부터), 신동근, 양향자, 김종민, 노웅래 신임 최고위원이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이제 당을 잘 이끌어 달라”

이낙연 대표에 축하 전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높은 득표율을 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부에서 내각을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달라”며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 측 최인호 의원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선된 최고위원들께도 축하 인사를 전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난 극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정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통합당·국민의당 “야당과 협치 나서야” 정의당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민주당 전대 각 당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새 당대표 선출에 대해 야당은 협치를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9일 선출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에 축하를 보내며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협치를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당,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새 지도부가 열린 마음과 진심으로 건전한 여야관계, 진정한 협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에 소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통법부가 아닌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건설적인 당정관계는 그렇게 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선출된 이낙연 대표에게 “지금까지 집권 여당에서 보여준 불합리하고 오만한 보이기가 한 모습을 탈피하고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라도 상식적인 나라,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치 토대를 양장서서 마련해줄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년여 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민에게 공언한 멋진 약속들을 역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낙연 대표를 향해 “신속하게 2차 재난수당 지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여당에 필요한 태도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 야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한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위, 친문 인사 대거 입성... 양향자 5위 ‘선전’

민주당 전당대회

‘조국사태 소신발언’ 김종민 1위

연태영, 지자체장 출신 첫 선출

양향자 “한국판 뉴딜 반드시 성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홍행에 실패하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애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대면 접촉이 금지되면서 인지도가 높은 이낙연 후보의 압승이 예고됐고, 결과 또한 예상을 빚나가지 않았다. 최

고위원회 경선에서는 5위를 기록해 자력으로 최고위원 자격을 획득한 양향자(광주 서구을)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민주당 경선대회가 상급계 끝난 것은 당 대표 경선에서 전혀 이변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가 60.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올린 배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유효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로서 각종 재난 앞에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에 관심이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최근 차기 대선 선출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린 만큼 이 지사를 견제하는 심리가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고위원에는 친문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에서 친문·비문 없이 ‘친문 구애 작전’에 몰두했다. 지도부 선출이 ‘대의원 45%+권리당원 40%+국민 10%+일반 당원 5%’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당시 확보가 승패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강심 발언으로 친문 진영에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19.88% 득표율로 1위로 입성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을 지낸 이 이어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지지 등에 업은 연태영 후보 역시 2위로 첫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